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 공개 수준을 높이자!



한국산업위생학회 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 박 동 옥

정부3.0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자료와 정보를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가공·정리해서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수많은 자료와 정보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고 이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가공해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가 없거나 다양한 요인과 수준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료와 정보는 공개해도 쓸모가 없다. 국가는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와 정보를 골라내고 이를 잘 가공하고 정리해서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의 공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민간기관 등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정보의 양은 실로 막대하다. 예를 들어, 전국 사업장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매년 사업장에서 조사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특수건강진단 결과, 안전보건대행 결과, 산업재해 결과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빅데이터 중 가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선별하고 가공해서 공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정기적으로 추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과 건강영향, 산업재해 원인과 경향 등을 감시(surveillance)하는데 결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윤리적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의 공개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이다. 공개한 자료와 정보의 양이 적거나 심하게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산업재해통계는

매년 일정한 보고서 형식으로 ILO에서 정하는 최소 수준의 정보만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산업구조, 노동구조, 직업과 직종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추어 산업재해 원인을 규명하려면 다양한 수준으로 분류(classification)하고, 가공하며, 결합하는 등 자료를 새롭게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업환경측정 자료, 특수검진 결과, 작업환경실태 조사 결과 등은 아직까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고 정기적인 국가 공식 보고서조차 없다.

국가마다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의 종류, 가공 수준, 분석 수준 등은 각각 다르다.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는 목표는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경향을 판단하고 문제를 초래한 원인을 추정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주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공개 수준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공개 수준도 매년 진화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청 (Health Safety Executive, HSE)

영국 HSE는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공개하고 가공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 원인 변수별로 다양한 수준에서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표를 활용하여 공개하고 있다. 직업병 통계에서도 석면관련질병, 호흡기질환, 근골격계질환, 청력손실, 납 노출, 피부질환, 진동 등에 관한 통계를 국가 표준산업, 표준직업 등 원인 변수별로 분석하고 주요 결과를 공개한다.

근로자의 암 사망에 대한 통계 자료도 다양하다. 산업별 암 사망자 수는 기본이고 암 발생에 대한 직업 노출 기여율(attributable risk)도 제시한다. 게다가 건설업에서

암 발생이 가장 높은 원인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석면과 유리규산 노출로 인한 폐암과 악성 중피종, 태양 방사선과 콜타르피치 등의 노출로 인한 피부암 발생자 수 등 매우 구체적인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다. 직업 노출로 생기는 암 종류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산업별, 직업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암 종류를 추정하는 결과도 매우 인상적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ccupational Health Safety and Health, OSHA)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홈페이지에서는 ‘자료와 통계’(data and statistics)를 따로 구분하여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를 공개한다. 여기에는 예산-재해통계-감독 자료 등의 원시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가공·분석하고, 산업별·지역별 감독 원시 자료를 모두 검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심하게 위반한(the Severe Violator Enforcement Program, SVEP) 업체와 사업주 관련 목록도 공개하고 있다(<https://www.osha.gov/dep/index.html>).

OSHA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이러한 위반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다가 고용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무관심한 사업주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 2010년 6월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여기에서는 사업주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서 총 22개 자료를 공개한다. 흥미로운 것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별로의도성, 반복성, 재해규모 등이 모두 평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매주 공개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자료와 정보뿐만 아니라 분석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다(Regional Federal and State Fatality/Catastrophe Weekly Report). 건설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핵심 항목 10개가 공개되어 있는데, 이 중 4개 치명적인 위반 사항을 제거하면 435명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제언

통계청 공공정보 3.0목록에는 산업안전보건 자료나 정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여 직업법을 포함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왔다. 매년 후진국처럼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원인을 제대로 찾아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우선 공개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기초 자료와 정보를 공개해야만 앞으로 공개해야 하는 자료와 정보의 종류와 수준도 알 수 있다.

둘째, 공개할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는 다양한 수준과 깊이에서 가공해야 한다. 단순한 자료와 정보의 공개나 나열만으로는 숨어 있는 가치를 알아낼 수 없다. 사고,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자료와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류·가공·분석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과거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사고와 질병의 원인은 과거의 안전보건 자료와 정보에 숨어 있다. 과거 2000년 이전의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고 이를 공개·분석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보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의 공개가 개인 및 기업의 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 개인이나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와 정보는 보호받아야 한다. 공개할 자료와 정보의 선별 과정에서 윤리적인 경계를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국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 성격의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는 매우 많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를 선별하고 가공해서 공개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기초 자료가 공개되어야 정보의 질(quality)을 결정하고 핵심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근로자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산업안전보건 자료와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요청한다. 🐼